

主要業務報告

2005. 1.

國家記錄院

報告順序

I. 一般現況

II. 成果 及 未備點

III. '05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

I . 一般現況

1. 沿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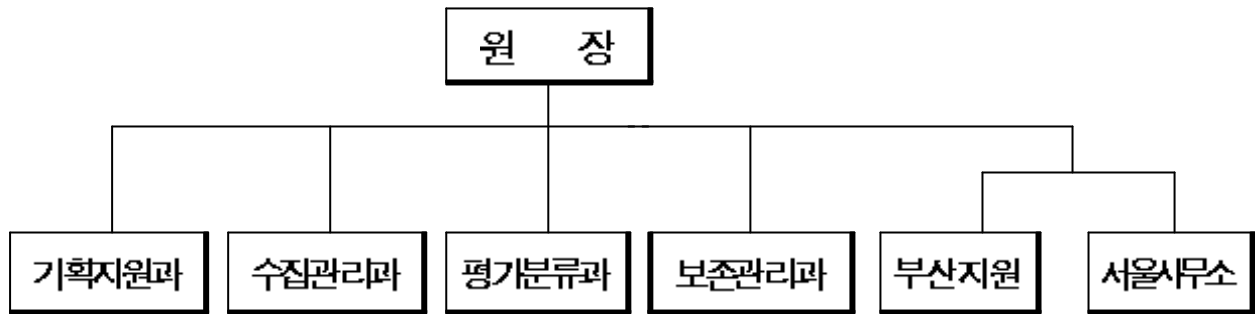
- 1969. 8 :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
- 1984. 11 : 부산지소 설치
- 1998. 2 :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
- 1998. 7 :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, 서울사무소 설치
- 1999. 12 : 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 제정(2000.1.1 시행)
- 2004. 5 :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

2. 主要機能

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및 제도개선
- 국가기록물 수집·보존 및 활용
- 국가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
- 기록물관리 기술 및 기법의 연구·보급 및 표준화
-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
-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-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·협력

* 소관법률 :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
3. 組織 및 定員



- ◇ 정 원 : 총 136명(본원 103, 부산지원 26, 서울사무소 7)
 일반직 92명, 별정직 5명, 기능직 39명
 전문계약직 2명, 국가기록물 정리요원 308명 별도

4. '05年度 豫算現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5예산	백분율(%)
합 계	44,826	100
○ 인 건 비	5,926	13.2
○ 기본사업비	1,061	2.4
○ 주요사업비	37,839	84.4
- 국가기록물 관리	1,842	
-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	30,000	
- 국가기록물 정리사업	4,476	
- 서울사무소 운영	243	
- 국가기록물 전산시스템 표준화	158	
- 국가기록물 광화일화	1,120	

*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: 9억 85백만원(별도)

5. 所藏 記錄物 및 書庫施設 現況

□ 소장기록물 현황

-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 848책(국보 151-2호)
- 근대개혁선각자, 항일운동가 재판기록 약 28만건
- 조선총독부문서 등 약 3만 1천권
- 역대 대통령결재문서, 대한뉴스 원판필름
- 정부수립이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등

(2004. 9. 30 기준)

구 분	소 장 량	비 고
문 서	1,202천권	조선왕조실록, 총독부 및 정부수립후 문서 등
도 면	1,235천매	지적원도, 기상관측도, 설계도 등
카 드	5,121천매	인사기록, 병적카드, 연금카드 등
시청각기록물	1,421천점	사진, 녹음테이프, 영화필름 등
행정박물류	14천점	우표, 엽서, 스크랩, 행정박물 등
대통령관련 기록물	169천건	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
마이크로 필름	220천롤	일반문서, 지적원도, 외교문서, 관보 등
간 행 물	303천권	정부간행물, 일반도서 등

□ 기록물 열람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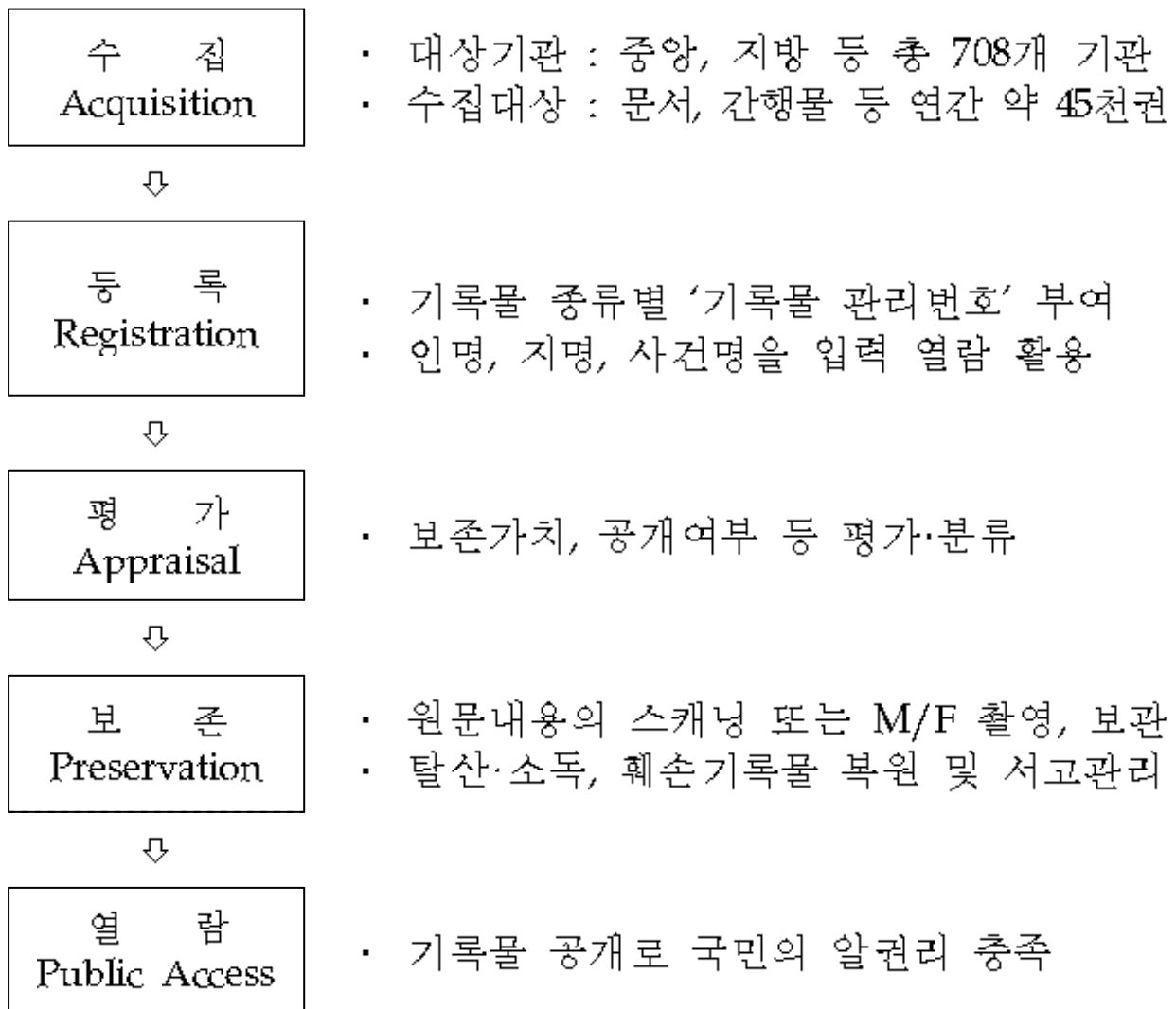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
15,087	17,522	32,445	45,395	83,854	130,642	209,798

□ 서고시설 현황

구 분	대전서고	부산서고	합계
면 적	1,474평	2,154평	3,628평
서가길이	28km	31km	59km
수용능력	770,000권	1,394,000권	2,164,000권

6. 業務 處理節次



Ⅱ. 成果 및 未備點

□ 법제정 이전 : '99년 이전

- 공무수행처리지침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법령공포원안이나 신분·재산증빙기록 등을 보존위주로 관리

□ 기록관리법률 시행이후 : 2000. 1 ~

- 대통령기록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기록물을 후대 기록유산으로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법률명칭 :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('99. 1. 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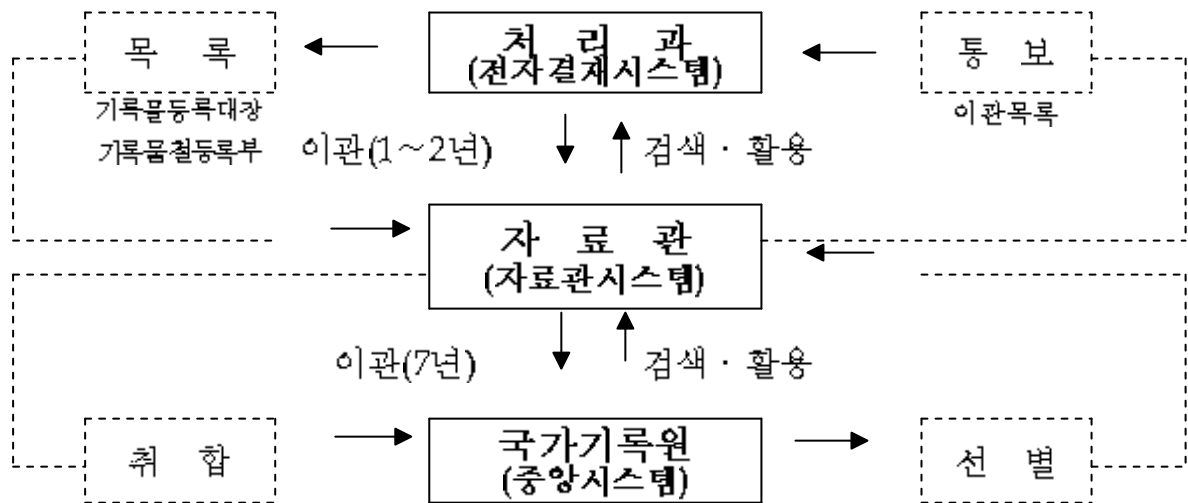
주요 골자

- 적용범위 : 국가기관, 공사립학교, 투자기관, 민간기록물
- 기 구 : 중앙기관 - 국가기록원
특수기관 - 국회, 법원, 국정원, 육해공군 설치가능
지방기관 - 16개 광역시도 설치가능
(특수)자료관 - 공공기관 설치의무화
- 관리방법 :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산시스템 관리
회의록 등 기록물 생산의무 부과
대통령기록, 시청각물 등 종류별 관리강화
기록폐기 심사절차 강화 등
- 전문인력 : 자료관 등에 기록관리학석사 등 배치의무화
- 위법행위 : 무단파기시, 7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

□ 법령시행 주요 성과

-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
 - '00~'04년부터 전자결재 - 자료관 - 국가기록원시스템의 연계망 구축 중('05년도 중 약 1,000억 투입예정)

[기록물 전산관리 기본체계]



- 신규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고시('03. 11)
 - '99~'03년까지 5개년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등 총 708기관 420만 단위업무 분류기준 작성 및 전자결재시스템 반영
- 공직사회 기록관리 실무교육 및 인식제고
 - 2000년부터 전국 순회교육, 연중 소집교육 실시
- 국제적 수준의 첨단 보존시설 신축 추진
 - 법 제정으로 기록물 이관량이 폭증함에 따른 서고부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성남의 국제연구교류단지(구 일해재단부지) 부지내에 부산, 대전서고에 이어 제3서고 신축(연면적 12,826평, 지하4층, 지상6층)

□ 시행상의 주요 미비점

< 제도적 측면 >

- 행정부기록물 이외에 입법·사법부, 국가정보원, 투자기관 등 국가 기록물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제도 미비
- 대통령기록, 회의록, 비밀 등에 대한 공개·비공개보호 제도가 미비하여 핵심기록물의 등록·관리 부실 초래

< 법령운영 측면 >

- 각급기관에서 기록관리 개선을 위해 자료관설치 등을 추진 중이나, 청사공간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애로
- 기록관리 중앙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정책·제도를 총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, 직제상 소속기관으로 효율적 법령시행 애로

< 공직사회 의식측면 >

- 기록관리 의식부재로 주요 핵심기록물 등록 누락, 무단 폐기 등 사례 잔존

〈'04년 각급기관 실태조사〉

- 대상기관 : 총123기관(중앙40, 지자체46, 교육청30, 기타7)
- 조사기간 : 1차(6.14 ~ 6.24), 2차(7.26 ~ 7.30)
- 중점점검사항 : 8개분야 62개 항목
(등록, 회의록, 폐기, 자료관설치, 서고관리, 공개, 인력 등)

⇒ '04. 8.23일 실태조사 결과 국무회의 보고시 대통령 지시

“국가기록관리체계의 근본적 재구축을 위해 대비실에 ‘업무 및 기록관리 T/F’, 혁신위에 ‘기록관리 혁신전문위원회’, 행정자치부에 ‘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 기획단’을 설치할 것”

Ⅲ. '05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

- ①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
- ② 국가기록원 내부혁신
- ③ 기록관리 의식개혁운동 전개
- ④ 공공기록물의 수집·보존
- ⑤ 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
- ⑥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조사 실시
- ⑦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·관리
- ⑧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
- ⑨ 기록물 정리사업 추진
- ⑩ 기록정보 공개 확대
- ⑪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
- ⑫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설치·운영 지원

1 國家記錄管理體系 革新

□ 목 표

- 공적기록의 철저한 관리로 행정의 책임성·투명성 확보
- 기록의 지식정보화로 업무의 생산성 제고
- 기록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정의 민주화 및 국민참여 촉진
- 국가 중요기록의 철저한 보존으로 기록유산 후대 전승

□ 추진경과

- 기획단 개소, '05년도 예산 확보 등 운영준비
- 기록관리법의 시행상 미비점 파악, 외국사례 비교연구 등을 통해 기획단 추진과제 설정(5개분야 20과제)
- 혁신워크숍 개최를 통해 추진전략 및 과제 조율
 - * 12.17~18 청와대·혁신위·기획단 합동 워크숍
 - 12.29 국가기록원·기획단 워크숍

※ 추진체계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대통령비서실 : 기록관리혁신 총괄·조율○ 기록관리혁신전문위(혁신위) : 혁신로드맵 수립, 개선방안 조율○ 행정자치부 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: 실천방안 마련 |
|--|

□ 추진계획

- 2005. 6월까지 국가기록관리 종합혁신방안 마련
- 2005. 12월까지 법률 제·개정
- 2006. 이후 연차별 후속조치 추진

◎ 企劃團 推進課題(案)(5분야 20과제)

분 야	추진 과제
1. 기록관리 표준화 및 프로세스 재설계	1-1 입법·사법·행정부 등의 기록관리 표준화 1-2 업무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1-3 기록물분류체계 재설계 1-4 기록관리유관시스템 연계방안 연구 1-5 회의록 등 핵심 기록물 관리 강화 1-6 기록물 종류별 관리체계 개선(정부간행물, 시청각물, 행정박물, 도면류, 카드류, 행정정보류 등)
2. 기록의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	2-1 기록관리 기구·기능 개편 및 기관간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2-2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구축 2-3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정립 및 지원강화 2-4 국가기록의 효율적 통합검색체계 확립 2-5 민간·해외기록 수집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
3.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확립	3-1 대통령 기록관리체계 재설계 3-2 대통령기록 공개·비공개보호 제도개선 3-3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방안 연구
4. 정보공개 및 비밀관리 제도 개선	4-1 기록정보 공개기준 및 재분류 제도개선 4-2 비밀기록관리 및 해제 제도개선
5.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	5-1 기록관리 전문인력 인사제도 확립 5-2 시설·장비 등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5-3 전자기록 관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5-4 공직사회 기록문화 정착

2 國家記錄院 內部革新

□ 국가기록원 업무혁신

- 업무프로세스, 사무분장, 인력운영, 시설·장비 관리 등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내부 업무시스템 개선
- 국가기록원 업무전문성 제고방안 추진
(OJT훈련 강화, 워크샵, 국내외 연수 등)

기록관리 보안체계 보강

- 기록물의 수집에서 서고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 보안상의 문제점 개선
- 기록관리자 신원조회 및 비밀취급인가, 사무실 및 보존서고 출입 통제, 기록물 반·출입절차 통제 등을 위한 전자보안관리시스템 구축

보존서고 재난대비관리체제 구축

- 화재, 누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초기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'보존서고 안전관리기준' 제정·운영

※ 내부 직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혁신팀 구성·운영

-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혁신역량 결집, 시스템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 추구, 국민과 각급행정기관을 만족시킬수 있는 기록 서비스 구현

③ 記錄管理 意識改革運動 展開

- 기록관리 제도혁신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의 기록관리 의식개혁 운동 강력 전개

□ 기록관리 교육 강화

- 장·차관, 실·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
(각종 연찬회 활용, 고위공직자위한 기록관리지침 제정 등)
- 기록관리 실무자 전문교육 강화(국가기록원 전문교육과정 내실 운영, 국내외 전문과정 연수 등)
* 2005년도 4개 과정, 1,500명 교육계획
- 일반 공무원에 대한 기록관리교육 확대(직장교육, 학습토론, 각급 교육원에 기록관리과정 설치 확대 등)

□ 기록관리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

- 법무부, 행정자치부, 국방부 등 7개부처를 기록물관리혁신 선도 부처로 지정, 시범사업 실시
- 각 기관별 혁신사례를 종합하여 표준모델을 작성, 전 중앙행정 기관에 전파

□ 기록관리 지도점검 강화

- 감사원과 협력하여 기록관리 지도·점검 지속 실시
특히, 기록관리 부진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기록관리법령 준수 분위기 조성

4 公共記錄物의 蒐集・保存

- 생산후 9년이 경과한 각급 기관의 준영구 이상 보존 기록물 (문서, 도면, 대장 등) 수집·보존

□ 업무절차

- 각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 2년 이내 자료관으로 이관
- 자료관 이관 후 7년이 경과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
- 이관기록물의 등록, 평가, 보존처리 등의 작업을 거쳐 열람 서비스 제공

□ 수집현황(최근 5년간)

<단위 : 권>

2000	2001	2002	2003	2004
573,409	119,221	41,395	39,073	47,768

- ※ 서고 잔여공간 부족으로 중요 기록물만 선별하여 이관
(현재 서고 잔여수용공간 : 약 16만권)

□ 향후계획

- 주요 기록물 선별 수집('07년도말 서고신축 이전까지)
 - 서고잔여 공간을 고려하여 연간 4만권 수집예정
- '07년말 신축서고 완공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이관대상 기록물 전량 수집(이관대상 기록물 약 400만권 추정)

5 記錄物 保有現況 全數調査 實施

- 기록관리 실태조사결과 국무회의 보고('04.8)의 후속조치로
각급기관의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시

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708개 행정기관(중앙부처, 특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)
 - 조사기간 : '04.9 ~ '04.11
 - 조사방법 : 서면조사
 - 조사내용 : 보존기간 5년이상 기록물 목록
 - 정부수립 이전 기록물(문서, 대장, 카드, 도면, 시청각자료)
 - 정부수립 이후 기록물(종이, 시청각, 비밀기록물 등)
- ※ '04.12.31현재 580개 기관 조사결과 통보(82%)

□ 향후 계획

- '05. 2 조사결과 취합·분석, 기록관리체계 혁신의 기초자료로 활용
- '05. 7 보유기록물 정리, 보존기간 재획정, D/B 구축
- '05. 8 각급기관의 미이관 기록물 이관종합계획 수립
보존서고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

⑥ 公共機關 記錄管理 實態調查 實施

-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실태 일체조사 실시
⇒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

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총564개 기관
 - 정부투자기관(13개)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110개), 특별법인(441개)
- 조사기간 : '04.12 ~ '05.1
- 조사방법
 - 1단계 서면 전수조사, 2단계 현장 표본조사(24개) 실시
 - 국가기록원·감사원 합동으로 현장조사팀 구성
- 조사내용
 - 기록물관리규정 유무, 기록물 관리시설·장비·인력, 기록물 관리·보존현황 등

□ 향후계획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개선방안 마련
 - 기관유형별 관리기준 마련, 관련법령 보완 등
 - 기획단의 기록관리 혁신작업과 연계하여 추진

㉞ 大統領 記録物の 蒐集・管理

- 민간 및 각급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발굴·수집

□ 추진실적 : 문서·시청각자료 등 28만여 건

-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최초로 김대중대통령기록물 156,910건 인수 (2003. 2. 24일)
- 역대 대통령기록물 수집·발굴
 - 윤보선 : 장남 윤상구씨 소장 대통령사임서 등 2,551건 수집
 - 김영삼 : 일기, 국정행사 관련 동영상기록물 등 1,157건 수집
 - ※ 전직 대통령·장차관·비서관 등 1,050명에 장관 협조서한 발송
- 생존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방문하여 영상 채록 실시
 - 김영삼대통령 2회 (180분), 노태우대통령 1회 (60분)
 - 재직 당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숨은 이야기 등 채록

□ 추진계획

- 역대 대통령 생가 방문하여 채록 및 기록물 발굴 계속 추진
- 각급기관 생산 대통령관련기록물 6천여 건 수집 추진 (법제처, 국방부, 철도청 등)
 - ※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은 혁신과제에 포함하여 추진
 - 대통령기록 비공개보호 제도 도입, 대통령기록관 건립방안 등

㉔ 海外所在 韓國關聯 記錄物 蒐集

-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·정리를 통해 역사자료 활용 및 문화유산으로 보존 도모

□ 수집 현황

-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에서 한국관련 문서 154,295매, 마이크로필름 3,657롤, 시청각·도면 1,307점 수집
- 주요 수집기록물
 - 미 국 : 한말~'70년대 한-미 정치·외교·경제관계 기록물
 - 일 본 : 일제의 조선정책, 조선총독부 기록물
 - 중 국 : 광복전후 북경한인 및 한국교포선무단관련 기록물
 - 러시아 : 독립운동 및 한인관련 기록물
 - 몽 골 : 일제시기 한인이주 및 북한-몽골관계 기록물

□ '05년 수집계획

-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몽골에서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 ('05년 예산 : 4.5억원)
 - 미 국 :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한-미 정치·경제관계 기록물
 - 일 본 : 국립공문서관 소장 친일·강제연행관련 기록물
 - 중 국 : 동북3성당안관 소장 조선족관련 기록물
 - 러시아 : 해방직후 북한-소련관계 기록물
 - 몽 골 : 외무성 소장 조선인이주 및 북한-몽골관계 기록물
- ※ 수집기록물의 번역·간행을 통해 활용도 제고

□ 향후계획

-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계획

9 記錄物 整理事業 推進

□ 추진배경

- '98 : 고택력 실업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록물정리 공공근로 사업 추진
- '03 : 일반사업으로 전환, “국가기록물 정리사업”으로 추진

□ 사업내용

- 기록물 목록입력, 상태평가, 정리, 제본, 보존매체 수록, M/F촬영 및 복제, 열람업무 지원 등

□ 추진실적

- '98년이래 국가기록원 보존기록물 200만권중 155만권 전산화 완료
⇒ 미정리 기록물 45만권 및 신규이관기록물 : '06년까지 정리완료
⇒ 각급 기관의 미이관 기록물(약 400만권 이상)을 포함하는 경우 정리사업 무기한 연장 필요

□ '05년 사업계획

- 예 산 : 4,476백만원
- 인원 및 1일 임금 : 308명(부산지원 포함), 35,000원
- 사업 목표량 : 33만권

10 記錄情報 公開 擴大

-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대상 기록정보 확대
-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정보의 온라인 제공체제 구축

※ 최근 2년 국가기록원 공개청구건수 약 250%증가(8만4천건 → 21만건)

□ 추진내용

- 불필요한 공개제한 해제
 - 공개여부 재평가를 통해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기록정보는 일반 공개로 일괄 재분류
- 주요 국가기록정보 원문내용 온라인 제공
 - 국가기록원 전체 소장기록 검색정보 인터넷 제공
 - 중요가치를 지닌 활용빈도 높은 국가기록정보 원문내용의 온라인 제공 확대로 보다 편리한 접근 보장
- 정보공개 청구 및 제공 절차 효율화
 - 불필요한 서류보완이나 동일 건 추가청구 발생 없이 1회 청구로 청구자가 원하는 정보의 최종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되도록 신속한 처리체제 구축

□ 추진계획

- 비공개기록 공개 재분류(매년 실시)
- 국가기록원 인터넷 통합검색시스템 구축
- 주요 국가기록정보 인터넷제공 서비스 확대

11 國家記錄物 保存書庫 新築

- 기존서고 滿庫해소 및 전자문서 등의 종합적 보존을 위해 추진
- 총수용능력 약216만권 대비 잔여용량 16만권('07년 완전만고)
- '04. 12월 착공, '07년말 완공예정

□ 사업개요

- 신축부지 : 성남시 판교소재 국제연구교류단지내(12,865평)
- 건축규모 : 연면적 18,827평(지하4층, 지상6층)
- 총사업비 : 1,403억원(국비)

□ 추진실적

- '02년 부지확보 및 설계공모(당선작 :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)
- '03년 기본조사설계, KDI의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총사업비 증액
(499억→1,421억), 건축규모(8,607평→ 15,990평) 확정
- 2004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공식 개최(12.10)
※ 조달입찰로 감리(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), 시공(동부건설주식회사)업체 선정

□ 향후계획

- '06년까지 3개 서고간 기록물 재배치 및 각급기관의 미이관
기록물 이관계획 수립
- 시설·장비 현대화 계획 보완(미국, 캐나다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
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 건립)
- 아울러 대전 및 부산서고 리모델링 사업 착수 검토

12 各級 記錄物管理機關 設置・運營 支援

□ 추진배경

-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록물관리기관(특수기록물관리기관, 자료관) 설치 의무화
 - ※ 특수기록물관리기관 : 입법·사법부 등에 설치, 당해 기관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
 - ※ 자료관 : 국가기록원의 관리대상이며,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설치

□ 추진현황

- 국회, 대법원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8개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완료
- 자료관은 전체 대상기관 708개중 97개 기관 설치(14%)
 - ※ 기록관리 전산화를 위한 자료관시스템은 '04년말 현재 472개기관 구축(66%)

□ 향후 추진 계획

- 자료관 및 자료관시스템 설치 지원
 - 각급 기관 자료관 설치 촉진을 위해 시범기관 운영, 지속적인 직무교육·기술지원,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
 - 기록물처리 전과정의 전자화를 위해 자료관시스템은 '05년말까지 설치완료 추진
-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방안 개발·보급